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혁신기획과
 행정안전부	2019년 1월 22일(화) 석간 (1. 22.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배일권 사무관 이성락
		연락처	02-2100-3420 02-2100-3414

2018년 정부혁신에 앞장선 12개 우수기관 발표

- “농식품부, 고용부, 식약처 등 정부혁신 잘했다” 정부포상 수여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하였다.
 - 그 결과,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선정되었다.
-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했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춤으로써 국민편익을 증진하였다.
 - * 평균 소요기간 3.1일 단축, 산재신청 건수 21.5% 증가
 -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의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하여 국민들의 세금 신고 불편을 대폭 해소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의 경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상승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국민이 불안해하는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건강과 안전에 대한 정부 신뢰도를 높였다.
 - * 인터넷 방문자 39만명, 청원 547건, 검사 3건 (영유아용 물휴지 및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 또한, 수입에 의존하던 ‘필수치료제의 국내자급’ 성공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성과도 얻었다.

* 필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해 위탁제조 계약

-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운영하여 항로 단절의 우려가 있는 적자항로 또는 1일 생활권 항로를 지원하고 그를 통해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 실현 및 연안여객선의 공공성을 강화하였다.

- 또한 기업 사내벤처를 벤치마킹한 ‘벤처형 조직’을 운영하여, 드론을 활용한 불법조업 감시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였다.

- 반면, 평가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들의 경우,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하였고, 국민 참여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또한 기관 간·기관 내 협업도 중점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율 등

- 정부혁신 평가는, 지난해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의 본격적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 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 / ** 지역 및 연령 등 고려, 국민 200명 선발

- 주요 성과로는 효율과 성장 위주였던 정부 운영 및 정책·서비스 설계를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전환 노력*하였다.

*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개선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 등), 공공부문 여성 진출 확대, 안전·환경·사회적약자 배려 등 주요 과제 예산 대폭 확대

- 예산편성, 법령심사, 평가 등 행정내부 분야까지 국민의 참여 확대*, 기관 간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하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전 부처 시행, 국민참여 예산제 도입, 국민참여 법령심사제 활성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실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토록 개선,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

- 또한, **공직사회 내 부패·성폭력 등의 개선 노력***,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가 제고**되었다.

* 종합청렴도 상승 : ('17)7.7→('18)8.17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신고-피해자 지원-조치) 마련

** 모바일을 통해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등 사전 알림 서비스 제공

📊 등급별 가나다 순 / ■ '17년 대비 상향 ■ '17년 대비 하향

구 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우 수 (12개, 30%,)	고용부, 국민권익위 , 농식품부, 외교부 , 해수부 , 행안부	관세청, 국세청, 농진청, 병무청, 식약처 , 통계청
보 통 (23개, 50%)	과기정통부 , 교육부, 국방부, 국토부, 금융위 , 기재부, 방통위 , 법무부, 보건처, 복지부 , 여가부 , 중기부, 환경부	경찰청, 기상청 , 문화재청, 법제처, 산림청, 인사처, 조달청, 특허청, 해경청 , 행복청,
미 흡 (8개, 20%)	공정위, 문체부, 산업부 , 통일부	방사청 , 새만금청, 소방청, 원안위

□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1.22.발표)에 반영되고,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보완하고, 중앙행정기관 실정을 반영하여 정교하게 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다.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18년이 혁신체계와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면 올해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서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 개요

□ 평가목적

- 중앙행정기관의 정부혁신 추진실적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정부혁신의 공공기관 확산 도모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

□ 평가대상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18부 4처 16청 5위원회

□ 평가방법

- 행안부 「정부혁신평가단*」 구성·운영,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활용
 - *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로 등 20명
 - ** 여성 의사결정 권한·성평등 기여도(여가부), 인권개선(인권위), 중증장애인·중소기업 생산물품 구매(복지부, 중기부), 협업·조정·갈등관리(국조실), 신뢰도(외부전문기관), 청렴도(권익위) 등 과제 주관부처가 평가하고 결과를 반영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 병행

□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혁신준비 (15)	사회적 가치를 위한 혁신 인프라	실행계획의 충실성
		혁신 추진 기반
혁신실행 및 성과 (75)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 인권개선 및 구매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
	참여와 협력	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협업·조정·갈등관리
	낯은 관행을 깨는 신뢰받는 정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
대표사례(10)		기관대표 혁신사례

참고 2

2018년 정부혁신평가 우수 부처 성과 및 대표사례

□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 및 정책 추진이 우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관 대표혁신 사례가 있음

●: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고용노동부	●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 제거 *산재신청 건수 21.5% 증가, 평균 소요기간 3.1일 단축 ● 청년이 원하는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놓은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 62개 정부 정책 및 160개 공간 정보 제공 중, 개설 이후 하루 평균 1만5천명 방문, 7백여명 실시간 카톡 상담 ● 부처 청렴도 2등급 상승 *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 : (‘17) 4등급 → (‘18) 2등급
국민권익위원회	● 안전 분야 민원 예보 실시* 및 주요 이슈 민원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 미세먼지·폐비닐류수거 대책 요구 등 ** 자전거 민원 6,400여건, 물놀이 시설 민원 1,400여건 등 분석 후 정책시사점 제시 ● 공공기관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피해자 구제** 및 제도 개선*** * 수사의뢰 109건, 징계절차 회부 255건, ** 채용완료 245명, 채용기회 부여 25명, *** 징계시효 연장,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 분석, 실시간 민원 현황판을 구축하여 대국민 공개 * 대국민 서비스 42종, 주요 공공 데이터 3종 공개
농림축산식품부	●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성 강화, 농업인안전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농업인 사회안전망 강화 *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평균 3배), 재해보험 품목 확대(53개→57), 보험료 인하 (5~10%), 취약계층 지원 확대(보험료 50%→70) ● 민관합동 방역체계 구축, 예방적 방역 강화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최소화 * 전년대비 ‘18년 동절기 AI 발생 94% 감소 ● 한우 대상 축산물 이력제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 적용하여 업무상 비용 및 시간 절약 * 축산물 유통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기간이 최대 6일 → 10분 이내로 단축
외교부	●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18.5월)를 통한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 구축 * 홋카이도 지진 발생 시, 24시간 내 신속대응팀을 파견하여 우리국민(약 6,000여명)의 신속한 귀국 지원(‘18.9월) ● 인사운영의 공정성·균형성·개방성 확보 * 과장급 여성관리자 31%, 신규 고위공무원의 33% 非외시, 재외공관장 외부영입 18% ● 국민외교센터 개소(‘18.5월) 및 활성화(50회 이상 이용)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서비스 도입(‘18.10월) ● 블록체인에 기반한 영사확인시스템 구축으로 재외국민 국내 금융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 도서지역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운영 * 9개 항로 운영(1일 생활권 구축항로 4, 연속 적자항로 5) ●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점검, 선원 교육 시행, 개선사항 발굴하는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 ● 정부 최초 벤처 조직 운영, 해양수산 현장에 드론을 도입하는 ‘오션 드론 555’ 전략* 수립 * 5대 지역 거점 중심으로 드론허브를 구축하여 해양 감시체계 혁신방안 수립

행정안전부	●민관협력 드론 긴급운영팀 가동을 통한 태풍 ‘솔릭’ 재난피해 대응 ●광화문1번가 상설 운영을 통한 정책제안 발굴 *열린소통포럼 10회 운영, 정책제안 총 72건 발굴 ●9만 여종의 정부서비스 ‘정부24’로 통합·제공, 국민·기관간 양방향 문서유통을 위한 ‘문서24’ 확대·개편
관세청	●수입주류 폐기방식 개선(소각·매립 →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 문제 해결 ●상공회의소와의 협업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시스템에 수출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사용자 절차 간소화 ●해외직구 반품에 따른 관세환급 절차 개선 * 1,000불 이하 물품은 수출신고 없이 환급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 완화* * ‘19년까지 자영업자 대상 신고검증 및 소상공인 대상 세무검증 전면유예·면제 ●법원행정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 등 세금 신고가 가능해 지도록 개선 * 납세자 방문 불편 해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비용 감축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신청·소득세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보이는 ARS」 도입
농촌진흥청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수직정원(그린스쿨) 조성 ●농식품부·산림청 등과 협업을 통해 돌발해충 협업방제체계 구축 강화, 해충으로 인한 피해감소 * 미국선녀벌레 약 408억원, 갈색날개매미충 약 118억원, 꽃매미 47억원 피해감소 효과 ●청·병원·민관전문가 합동 찾아가는 이동식 농업종합병원 운영 (농업기술, 의료, 생활시설 수리 등 서비스 제공)
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제도를 통한 청년 취업 지원 강화 * ‘18년 해·공군·해병대로 범위 확대, 전역자 1,350명 중 714명 취업, 753억 경제효과 창출 ●국방부와 협업을 통해 군 운전경력이 포함된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하는 서비스 제공 ●각종 통지서를 모바일을 통해 전달하는 발송체계 도입 (병무청 앱 및 카카오톡 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필수치료제의 국내자급* 성공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자 치료기회 확대 * 카나마이신 주사, 답손 정제 등 필수약품 안전공급을 위해 정부지원을 통해 위탁제조 계약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도입, 국민이 불안해하는 제품을 정부가 검사하여 결과를 대국민 공개 * 인터넷 방문자 39만명, 청원 547건, 검사 3건 (영유아용 물휴지 및 기저귀, 다이어트 음료)) ●수입식품 통관단계 증명서류 간소화 * 증명서류 22종 폐기, 전자문서 형태 위생증명서 인정 법적 근거 마련
통계청	●통계조사와 행정자료(건축물대장도면)를 융합하여 사업체 실내공간 지도 구축 * 재난안전 사고에서 소방, 경찰 등의 신속한 현장 출동 지원 ●공공·민간 구인정보*와 일자리 통계정보를 통합하여 구직자 조건에 맞는 일자리맵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 워크넷, 취업포털 인크루트 등 ●인구·고용·실업 등 국가 통계정보를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한 서비스 제공 (네이버 검색 기반)